

| 의제별위원회_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소개 |

취약계층 소득보장 방안 구체화 논의 주력

송해순 전문위원

발족개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1.31.)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합의 이후,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4.3)에서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합의에 따라 구성됐다. 이후, 준비회의(4.18.)와 준비위원회(5.15.)를 개최하여 회의체 명칭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로 확정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7. 12.(목) 제1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주요의제

논의의제는 ① 현재의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②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③ 사회서비스인프라 및 재원·부과시스템 마련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위원 구성

위원은 장지연 위원장, 노동계(미조직·취약계층 포함) 3명, 경영계(미조직·취약계층 포함) 3명, 정부 3명, 공익 7명, 간사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구분	위원 명단
위원장(1)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노동계(3)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미정
경영계(3)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전인식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 본부 고용노동정책팀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정부(3)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이덕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익(7)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간사위원(1)	송해순 전문위원

논의시한

의제별위원회의의 운영기간은 발족일로부터 1년으로, '18.7.12.~'19.7.11.이다. 단, 필요 시 1년 이내에서 운영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향후계획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체제에서 총 9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3차 간사단회의(8.21.)에서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도출했다. 추후,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문 구체화 논의를 진행하여 합의 관련 후속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7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제7차 전체회의(10.12.)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발제에 이어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발제를 통해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등 추진내용을 설명했다. 관련하여 3대 비급여 해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개선, 신포괄수가시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보장성 확대(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확대 등)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수요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수급 고착화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간호간병을 확대하겠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간호 인력 보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영계는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부분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현했다.

8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제8차 전체회의(11.2.)에서는 제4차 간사단회의 결과(10.26.)를 보고하고, 제3차 간사단회의(8.21.)에서 도출한 합의문(안)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듣고 논의했다.

제4차 간사단회의 결과 첫 보고 안건은 건강보험 관련 운영 방식으로 논의 틀은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으로 하고, 주요 역할 및 목표는 건강보험 주요 쟁점을 다루어나가기 위한 전략·기획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공익위원 및 기획단 단장으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두 번째 보고 안건은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향후 일정으로, 논의 의제를 ‘취약계층 소득보장’ 관련 합의문 내용 구체화, 소득보장제도, 건강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지속가능 시스템 마련, 인프라 개편 등으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의 추진현황에 대해 위원들은 합의의 기본 정신은 정부의 기본 계획을 앞당겨 이행하라는 의미였으나, 현재 이행 현황을 보면 실천적 실행에 대한 담보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를 했다.

구체적으로 1. 근로빈곤대책 중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우선적으로 다른 제도 간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영세자영업자 구직활동 지원 정책은 지나치게 소극적 정책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 노인빈곤대책 부분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부족하며, 기초연금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함께 풀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 급여 보장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 사회서비스 강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요양기관과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정부의 추가 추진 현황을 듣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구체화 방안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9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제9차 전체회의(11.16.)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시책에 대해 듣고 논의했다.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 창업 지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방안으로 상권정보시스템 제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을 소개했고,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정책자금, 역량 Jump-up 프로그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유망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지원, 나들가게 육성, 중소유통 협업화 등을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으로는 희망리턴 패키지, 재창업 패키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카드수수료, 임대료, 골목상권 등 문제가 70%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익위원들은 자영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통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차기 회의에서는 자영업 현황 및 방안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설치개요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건강보험TF를 확대하여 구성한 회의체로,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의료보장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목적으로 설치되어 11월 28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의제

논의의제는 ① 건강보험의 범위, 대상, 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② 건강보험의 적정 부담 수준, ③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실태조사 및 관계설정, ④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⑤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⑥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 ⑦ 건강보험 재원조달, ⑧ 국민과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 8가지이다.



기획단 구성

기획단 구성은 김윤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각 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구분	위원 명단
단장(1)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노동계(2)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미정
경영계(2)	이승용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 팀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 부장)
정부(1)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공익(3)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간사(1)	이지은 전문위원

논의시한

기획단 운영기간은 2018.11.28. ~ 2019.04.27.이다.

향후 계획

기획단은 건강보험TF 1, 2차 회의(09.13., 10.11.)에서 정리한 8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고자 하며, 운영기간 중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건강보험관련 논의들을 종합·정리해 나갈 계획이다.